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명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광주시 등 일부 시·도 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에 대한 찬반으로 선거판이 달구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우려하는 예산 문제에 다른 부문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의 지출을 줄여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없도록 충

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대쪽은 강경한 어조로 무상급식이 선거를 앞두고 두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월4일자 사설에서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교·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천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 좌파의 복지 정책이 국가를 부도 사태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2월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에게 조찬회 동에서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결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안 된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13% 정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논란의 초점은 바로 이 '가정형편이 어려운'이라는 단어에 있다. '한 반이 40명'이던 전국적으로 평균 5, 6명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데 그 아이들에

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더욱 확대할 것이냐, 전면 실시할 것이냐?' 하는 실행 방법의 문제로 보인다. 더욱이 무상급식 실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니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전면적으로 실시하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안도 없이 표를 의식해서 무조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이 문제를 포퓰리즘이나 좌파의 이념과 연결시켜 쟁점화하는 일 또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더 중요한 교육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날지, 아니면 평등교육의 혜택으로 인해 양성의 토대가 튼튼하게 마련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민생이나 교육과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거나 선거의 유희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수립이라는 과제 속에서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본다.

이렇듯 민생이나 교육과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거나 선거의 유희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수립이라는 과제 속에서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본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안도 없이 표를 의식해서 무조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이 문제를 포퓰리즘이나 좌파의 이념과 연결시켜 쟁점화하는 일 또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더 중요한 교육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날지, 아니면 평등교육의 혜택으로 인해 양성의 토대가 튼튼하게 마련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민생이나 교육과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거나 선거의 유희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수립이라는 과제 속에서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본다.

이렇듯 민생이나 교육과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거나 선거의 유희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수립이라는 과제 속에서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본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장기기증, 지역민 인식변화 시급하다

최근 광주에서도 장기기증 서약자가 확산되고 있으나 타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서약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2월 마지막 순간까지 각 장기기증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김수환 추기경의 아름다운 선행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광주도 지난 1년간 장기기증이 배 이상 늘었으나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0% 정도 감소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안구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장례 문화가 보수적인 탓이 크다. 이지역이 전통적인 농업지역인데다 고령층 인구가 많아 매장 형태의 장례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체 훼손을 꺼리는 유교적 성향이 강

한 점도 장기기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각막 이식은 제2의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각막이식을 받지 못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국내에 2만명이나 된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된 각막을 이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떨쳐내야 한다. 아울러 장기 기증을 보다 쉽게 하고, 기증된 장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장기 기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기증은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이 관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평생 실천했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길 때다.

'노노갈등' 금호타이어 회생 걸림돌 돼서야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려던 금호타이어가 이제는 '노노(勞勞)갈등'으로 인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노노갈등의 여파는 노사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3개월 가까이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돈줄이 막혀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우려된다. 직원들은 2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80여 협력업체들은 지난 연말부터 대금결제 지연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단이 당장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구조조정 동의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채권단이 노조의 동의를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과 수출을 위해 3천만달러 한도

의 신용장 개설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조의 입장만 따진다면 회사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노조가 이처럼 강성기류로 흐른다는 노노간의 갈등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노조에 두개의 조직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하다 보니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인원 구조조정이 철회된다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고뇌를 하겠다"고 사측에 약속해 놓고도 "정리하고 대신 상여금 삭감"이라는 고령 분담 차원의 구조조정 수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노조 내부의 알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노조 내부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회사의 사활이 경계에 달려 있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금호타이어 사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의 존립문제가 노노갈등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임병선



저는 이제 국립목포대학교의 제5대 총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에 앞서 글을 올립니다. 지역민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제가 4년의 임기를 문제없이 마무리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4년 전 취임식에서 '우리 대학은 지역산업에 이끌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 학생을 내실을 갖춘 인재로 키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이루고자 목포대학교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높은 과고를 넘어 우리 대학은 신도청시대의 전남 거점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서로 융화되었기에 가능한 일

셋째, 동북아 국제교류 중심대학으로 도약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교류원을 신설하여 외국대학과 학술교류 확대 및 학생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11개국 27개 대학과 국제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4년전 74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도 46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에도 매년 평균 1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학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협력에 힘쓰고 하고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지역발전은 대학이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전라남도, 국가기관, 연구소, 산업체 등과 191건의 MOU를 체

거점대학을 향한 열정의 발자취

이었습니다. 그 기반들 중 몇 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국제교류 중심대학으로 도약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교류원을 신설하여 외국대학과 학술교류 확대 및 학생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11개국 27개 대학과 국제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4년전 74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도 46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에도 매년 평균 1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학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협력에 힘쓰고 하고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지역발전은 대학이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전라남도, 국가기관, 연구소, 산업체 등과 191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목포대학교는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성원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간호학과와 같은 경쟁력 있는 학과를 신설하고 사범계 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범대학도 설치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종합인력개발원을 신설하였고,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교수·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교육중심 대학으로서의 대학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기고

정병재



최근 기후변화대응이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그 다음해 8월에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안을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개설되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지역을 탄소금융도시로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은 금융권 증권거래 중심지, 부산은 선물거래 중심지가 있지만, 국토 서남부에는 이에 비교할 금융거래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전남은 CDM(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추진 최적지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13백만 톤인데 이 가운데 광주·전남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 23백만 톤으로 전국대비 20%

탄소배출권거래소, 녹색의 땅 전남에

적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 등)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래 녹색산업으로 떠오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1,523천MW(전국대비 2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정산거래소 7개 소중 4개소가 전력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기 구축된 전력거래 인프라를 활용하여 배출권거래 참여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될 한국전력거래소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개설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녹색성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녹색성장의 출발지인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전남발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수산시장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위험천만'... 점검 필요

수산시장은 활어 때문에 업소마다 수족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장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제 언제 어떻게 합선이나 누전을 일으켜 사고를 낼지 몰라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물론 불이나 전기가 끊기면 수족관 안의 값 비싼 활어가 죽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화재도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것인지 알수 없을 만큼 낡아있다. 스티로폼 위에는 전원이 켜진 전열기가 무방비로 놓여 있고 임시로 만든 가계 전선은 불이 나면 유독가스를 내뿜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수 합판으로 덮여있다.

더욱이 수산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바닥에는 물이 고여있어 전기 감전 등 위험이 아주 높다. 모두 다 나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해서 미미리미 안전점검을 해두고 상시로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無等鼓

한국의인 미의식은 독특하다. 우리 조상이 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화려하고 향기가 진한 꽃보다, 수수하고 은근한 기운을 자랑하는 꽃을 더 좋아했다.

않으나 은근한 암향(暗香)이 시인·묵객의 발길을 이끌었던 것이다.

매화여행은 요즘도 이어진다. 3월 하순에 열리는 광주 매화축제, 해남 보해매원의 매화 사진 촬영대회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축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호남오매(湖南五梅)로 불리는 순천 선암사의 '선암매',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 전남대학교의 '대명매', 담양 지곡

이 아니라/절조를 지니고 결백을 지킨 절개가 높아서라네(逋也爲妻不是妾/抱貞守白節何花)"

송나라 임포가 매화를 아내처럼 사랑한 것은 매화의 아름다운 자태보다는 그의 절개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움에 윤리적인

리의 '계당매', 소록도의 '수양매'를 찾기도 한다. 엄동설한이라는 혹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을 배우려는 수신행(修身行)이다.

순천 쪽에서 며칠 전 매화 소식을 이르렀지만, 아직은 이르

다. 매화여행은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주요한 볼날 행사였다. 차가운 눈발을 헤치고 피어나는 매화를 감회하며, 군자로서의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빗꽃처럼 화려하지 않으나 수수한 아름다움, 장미처럼 향기가 진하지

다. 전언이다. 대신 광주 매곡동 매화가 먼저 흐드러졌다. 국립 광주박물관이 '탐매-그림으로 피는 매화' 전시회를 다음달 말까지 일정으로 열고 있다. 이번 주말 그림에어나매 매화향을 감상하면, 군자로서의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다. /김주정 정치부장 jiwnews@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